

경 제 법

문 1. 다음 사안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국내에서 혈액암치료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A, B, C는 치료약의 투여 시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원료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하였다. 동 원료를 이용하여 A, B, C는 현재 국내 혈액암치료제시장에서 각각 30%, 24% 및 15%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. 혈액암치료제시장의 후발 주자로서 점유율이 8%에 불과한 D는 A, B, C가 공동으로 개발한 원료의 공급을 요청하였으나, A, B, C가 이를 거절하였다.

- ① A, B, C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시장을 확정하여야 한다.
- ② 혈액암치료제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확정할 경우 A, B, C가 합계 69%의 점유율을 가지는 데 불과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지 않으므로, 진입장벽의 존재와 정도 등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유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하여야 한다.
- ③ A, B, C가 공동으로 개발한 원료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필수요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 성립하고, 부당한 출고조절에 해당한다.
- ④ A, B, C의 남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급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⑤ A, B, C는 새로 개발한 원료에 대하여 특허를 가지고 있으므로, 공급거절이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
문 2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등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명령에 대한 불복의 소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-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시정조치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없다.
- ④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면직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.
-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경고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상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문 3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동의 거래거절 유형은 해석상 같은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과 중복 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
- ②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유형을 기타의 차별적 취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.
- ③ 끼워팔기의 행위주체는 거래상대방이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가져야 하고 따라서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의미한다.
- ④ 거래상 지위의 남용을 규제하는 입법취지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같은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.
- ⑤ 부당염매는 경쟁사업자 배제의 한 유형으로 주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가 문제된다.

문 4. 부당한 자금·자산·인력의 지원행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?

- ①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계열증권회사가 당해 회사채 전량을 인수하도록 하면서 고가의 인수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상품·용역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.
- ② 모회사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지원행위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③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의 본질은 오로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와 거리가 멀다.
- ④ 자동차제조업체가 계열회사인 자동차판매회사와 아무런 직접적 거래 없이 단지 자사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자동차구입대금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무이자로 대출해 준 행위 역시 부당한 지원행위가 된다.
- ⑤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지원행위 당시 일정한 거래 분야의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.

문 5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제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묶인 것은?

ㄱ. 공동연구개발협정	ㄴ. 디자인사용권도입계약
ㄷ. 1년 미만의 수입대리점계약	ㄹ. 차관계약
ㅁ. 음반저작권도입계약	

- ① ㄱ, ㄷ ② ㄴ, ㄹ ③ ㄴ, ㅁ
- ④ ㄷ, ㄹ ⑤ ㄷ, ㅁ

문 13. 지주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방법들 가운데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한 지배만이 문제된다.
- ②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사업관련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.
- ③ 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소유주식의 감소 등의 사유로 지주회사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소급하여 지주회사로 보지 않는다.
- ④ 일반지주회사의 사업관련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.
- ⑤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유형과 관계없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.

문 14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역외적용이란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같은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사업자와 일정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를 규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.
- ②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.
- ③ 역외적용에 관한 같은 법률의 개정이 있기 이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.
- ④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국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같은 법률의 집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률의 집행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·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.

문 15. 다음 중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?

- ① 생명·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- ②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할 권리
- ③ 신속·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
- ④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
- ⑤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

문 16. 약관의 면책조항에 대한 다음 논의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?

- ㄱ. 이행보조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이다.
- ㄴ. 이때 법률상의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을 의미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은 포함되지 않는다.

- ㄷ. 경과실에 대한 면책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.
- ㄹ.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면책하는 조항이 있으면 사고가 사업자의 고의 없이 발생한 경우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
- ④ ㄴ, ㄹ ⑤ ㄷ, ㄹ

문 17. 대리점계약서상의 “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향후 1년간 지속된다.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 갱신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1년간 씩 계속 연장된 것으로 하며,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이에 준한다”라는 조항은 어떤 불공정약관조항에 속하는가?(판례에 의함)

-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
- ②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·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
- ③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
- ④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
- ⑤ 지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

문 18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들로만 묶인 것은?(판례에 의함)

- ㄱ. “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 내지 내용물이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, 회사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”라고 규정한 정보서비스이용약관조항
- ㄴ. 보증의뢰인과 보증은행 사이에 체결된 보증의뢰계약에서 “보증의뢰인은 보증은행의 보증금 지급을 저지시킬 수 있는 가처분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”라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은행보증약관조항
- ㄷ. “고객은 현금 및 귀중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경비업자는 고의·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”라는 용역경비업약관조항
- ㄹ. 은행대출약관에서 계약기간 종료 시 이의통지 등에 의하여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,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갱신의 통지를 하거나 자동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

- ① ㄱ, ㄴ, ㄷ ② ㄱ, ㄴ, ㄹ ③ ㄱ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문 19. 할부거래와 약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공통적으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
- ② 약관에 의하여 할부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명시·교부·설명 의무가 면제된다.
- ③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.
- ④ 매도인, 매수인이 모두 상인인 경우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.
- 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의 소비자개념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의 고객개념은 일치하지 아니한다.

문 20.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?

- ① 할부기간이 2월이고 할부회수가 2회인 동산할부계약
- ② 자체할부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조·제공되는 목적물
- ③ 상인이 자신의 소비만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할부계약
- ④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
- 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

문 21.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말한다.
- ② 다단계판매원이 얻는 일정한 이익이란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.
- ③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이란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- ④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에 있어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.
- ⑤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에 있어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이고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되지 않는다.

문 22.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부동산개발업자의 영업사원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소비자에게 개발예정지역의 토지구입을 권유하고 실제 계약은 부동산개발업자의 영업소에서 체결하는 경우
- ㄴ. 화가의 그림 판매를 중개하는 자가 방문판매업자로서 그림을 노상의 임시가판대에 놓고 2개월여간 판매하는 경우
- ㄷ. 제주도에서 감귤농업을 하는 자로부터 감귤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청과물상회를 방문하여 구입을 권유하여 판매하는 경우
- ㄹ.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회사원을 상대로 회사사무실을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
- ① ㄱ ② ㄱ, ㄴ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ㄴ, ㄷ, ㄹ

문 23.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계속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한 계약 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③ 계속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는 그 계속거래의 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계약 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④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.
- ⑤ 계속거래업자는 재화 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방문·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문 24.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선불식 통신 판매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가 결제대금의 예치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10만원 이상의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
- ㄴ.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
- ㄷ.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
- ㄹ.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ㄹ ⑤ ㄴ, ㄷ, ㄹ

문 25.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묶인 것은?

- ㄱ.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
- ㄴ. 광고·표시 등과 다른 재화 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공받아 이용한 경우
- ㄷ.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- ㄹ.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- ㅁ. 복제가 불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

- ① ㄱ, ㄴ, ㄷ ② ㄱ, ㄴ, ㅁ
- ③ ㄱ, ㄷ, ㄹ ④ ㄴ, ㄹ, ㅁ
- ⑤ ㄷ, ㄹ, ㅁ

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